

건설동향브리핑

제492호 (2014. 12. 29)

■ 정책 · 이슈

-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 2015년 SOC 확정 예산, 전년 대비 4.7% 증액된 24.8조원

■ 경영 · 정보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효율적 교육 훈련 실시 방안

■ 경제 동향

- 2014년 분양시장, 물량 증가에도 호조세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기업의 윤리 문화 재점검이 필요한 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 민간 임대 사업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포함 -

■ 4개 부문별 다양한 경제 정책 과제 포함

-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위험 요인 사전 제거, 통일 시대 대비 등 4개 부문별 경제 정책 과제를 포함하는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의 4개 부문별 주요 과제>

구분	주요 과제	구분	주요 과제
핵심 분야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 공공 부문 효율성 향상 :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기관 정상화 - 노동 유연성/안전성 제고 : 임금/근로 시간, 근로 계약 유연성 제고, 우수 외국 인력 유치, 여성 경제 활동 참가 확대 -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 개편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 활력 제고	- 확장적 거시 정책 : 재정 조기 집행 - 소비 여건 개선 : 배당 확대, 연금 보장 강화, 일자리 확대, 생활 물가 안정 - 투자 의욕 고취 : 13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임대 주택시장 활성화 : 민간 주택 임대산업 육성, 수요 기반 확충
‘리스크 관리 3중 세트’로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가계 부채 관리 강화 : 장기/고정 금리 대출 전환 유도, 자영업자 대출 관리,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기업 사업 재편 지원 특별법 제정 - 자본 유출입 대응 : 모니터링 강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등 안전판 마련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 시대 대비	- 남·북 경협 : DMZ 평화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등 - 통일 준비 역량 강화 : 북한 통계 확충, 분야별 과제 발굴 - 북한 주민 생활 지원 : 농축산/산림 공동 개발 협력 기반 마련 등

자료 : 기획재정부

■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 도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과제가 포함됨.
-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의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기존의 수익형 민자 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을 보완해 수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BOA, Build Operate Adjust)을 도입
 - 민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도시 재생 기반 시설 포함 등)하고, 사업 절차 소요 기간을 대폭 축소. 구체적으로 평택-부여-익산(서부 내륙) 고속도로, 서울서부간선지하도로 등 2014년에 승인된 11개(4.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신속 추진
 - 토지 보상 지원 강화와 토지선보상제도를 지자체 사업에 확대 적용

- 갭 펀드(Gap Fund)를 확대해 벤처기업뿐 아니라 SOC 투자에도 활용할 방침. 갭 펀드는 투자 수익이 투자 비용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금융 지원 기법으로 신용 보장이 가능해지고, 자금 조달 구조가 다양화되는 효과 기대

■ 민간 임대주택산업의 육성으로 주거안정 도모

-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활용, 택지 용지 공급 조건의 완화(할부 조건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용 택지 확대 추진
 -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 지원, 리츠 상장 요건 및 출자 한도의 개선, 임대주택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신설 등도 추진
 - 대규모·소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 주택, 도시형 레지던스(Residence) 등 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

■ 건설기업 해외 진출 촉진, 재정 조기 집행 등의 과제도 포함

-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와 다양한 민간 재원을 결합·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EDCF를 활용한 이차(이자 차액) 보전·보증 제공·출자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EDCF 직접 대출 도입 및 EDCF 조건 우대 등을 추진할 계획
 -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자산 운용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 위탁 기관 확대
 - 해외건설 수주 확대, 지역/공종별 편중 현상 완화, 해양 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2015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
- 이 외에 재정의 조기 집행, 구조조정 건설기업의 시공 능력 수시 재평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상의 정보를 활용한 부실 건설기업 조기 경보 시스템의 정착화 등도 포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2015년 SOC 확정 예산, 전년 대비 4.7% 증액된 24.8조원

- 계획안보다 0.4조원 증액,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도로·철도 등 중점 증액 -

■ 2015년 SOC 예산, 당초 계획 대비 0.4조원 증액된 24.8조원으로 확정

- 2015년 SOC 예산이 당초 계획안보다 0.4조원이 증액된 24.8조원으로 확정됨.
 -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추가로 확충함.
 - 특히, SOC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해 기존 예산안인 24.4조원보다 0.4조원이 증액된 24.8조원으로 확정
 - 2015년 전체 예산이 계획보다 0.6조원이 감소한 반면, 분야별로는 계획 대비 최고 조 증액인 0.4조원이 SOC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었음. 이는 그만큼 내년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의 회복이 중요함을 시사함.
- 2015년 SOC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 세부 SOC 예산 내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예산이 계획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건설 예산 : (2014)14,766억원→(2015 정부안)14,470억원→(2015 최종)15,226억원
 -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예산 : (2014)245억원→(2015 정부안)137억원→(2015 최종)191억원
 - 이 외 SOC 예산에 속하지는 않지만, 건설과 관련이 높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및 2015년 광주 U대회,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수리 시설 개·보수의 예산도 계획보다 증액됨.

<정부 2015년 확정 예산 분야별 내역>

(단위 : 조원, %)

구분	2014년 예산	2015년 계획	2015년 확정	계획 대비 차이	전년 대비 증감률
총지출	355.8	376.0	375.4	-0.6	5.5
보건·복지·고용	106.4	115.5	115.7	0.2	8.7
교육	50.7	53.0	52.9	-0.1	4.4
문화·체육, 관광	5.4	6.0	6.1	0.1	13.0
환경	6.5	6.7	6.8	0.1	5.5
R&D	17.8	18.8	18.9	0.1	6.4
산업·중소·에너지	15.4	16.5	16.4	-0.1	6.8
SOC	23.7	24.4	24.8	0.4	4.7
농림·수산·식품	18.7	19.3	19.3	0.0	3.1
국방	35.7	37.6	37.5	-0.1	4.9
외교·통일·안전	20.0	21.4	21.4	0.0	7.0
일반·지방 행정	57.2	59.2	58.0	-1.2	1.4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주요 내용' 보도자료(2014.12. 2)

■ 국토교통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도로 및 철도 등 중점적으로 증액

- 정부 SOC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의 2015년 확정 예산은 22조원으로, 이는 2014년보다 1.1조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금액임.
 - 국토부 예산은 2010년에 21.3조원, 2011년에 20.9조원, 2012년에 20.0조원, 2013년에 22.0조원, 2014년에 20.9조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2015년 예산은 2013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임.
-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투자가 확대됨.
 - 도로 : (2014년)83,912억원→(2015년)90,173억원(6,261억원 증액), 철도 : (2014년)68,032억원→(2015년)74,051억원(6,019억원 증액), 안전 투자 : (2014년)3.3조원→(2015년)4.0조원
 - 도로 구조물 기능 개선 : (2014년)1,948억원→(2015년)4,459억원(2,511억원 증액)
 - 일반 철도 시설의 개량 : (2014년)2,600억원→(2015년)4,184억원(1,584억원 증액)
 - 특히, 오랜 기간 지역 숙원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되었음. 철도의 경우,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2억원→52억원),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건설(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 시설 재배치(55억원) 등에 예산이 배정됨.
 - 도로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150억원→2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국도 건설(3,130억원→4,104억원) 등에 예산이 배정되었음. 또한, 항공·공항의 경우,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에 예산이 배정됨.

<2015년 국토교통부 확정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정부안	증감	최종	전년 대비	
합계	209,116	227,049	-7,214	219,834	10,718	
S O C	소계	206,434	214,179	3,370	217,549	11,115
	도로	83,912	87,918	2,255	90,173	6,261
	철도	68,032	73,026	1,025	74,051	6,019
	항공·공항	1,008	1,284	76	1,360	352
	물류 등 기타	12,683	12,363	68	12,431	-252
	수자원	23,830	23,054	-322	22,732	-1,098
	지역 및 도시	7,978	7,802	97	7,899	-79
	산업단지	8,991	8,732	171	8,903	-88
사회 복지	주택	2,682	1,956	172	2,128	-554
	주거 급여	-	10,913	-10,756	157	157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0조원으로 확정' 보도자료(2014. 12. 3)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효율적 교육 훈련 실시 방안¹⁾

- 훈련 직종 조정 · 훈련 여건 개선 · 현장성 제고 · 직업 전망 제시 등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 훈련 참여자 규모는 작지 않지만, 실효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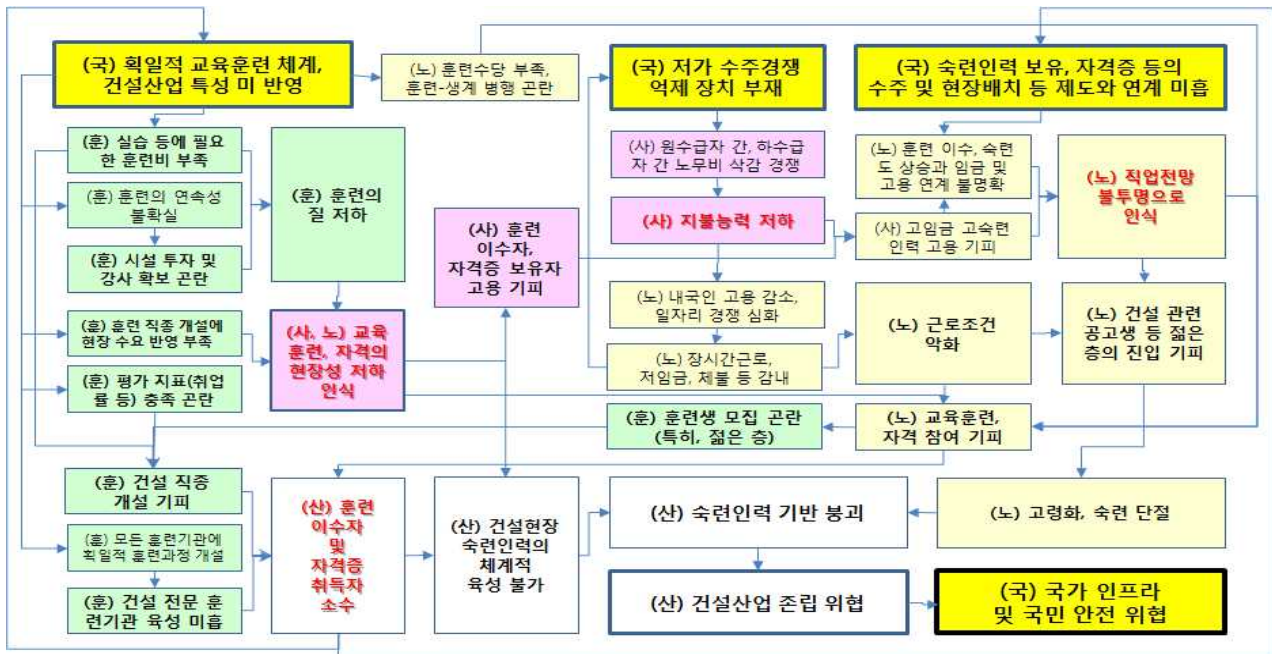
- 의견상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훈련 참여 인원 수는 약 1만 9,000명에 달해 그 수가 적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능 습득의 경로와 자격증의 보유 정도를 조사하면 공식 제도에 대한 실제 참여 정도는 매우 저조함.
 - 2014년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은 주로 건설 일용 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이하, 기능향상지원사업, 5,235명), 국가 기간 · 전략산업 직종 훈련(이하, 기간산업훈련, 7,130명),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하, 배움카드제훈련, 6,803명) 등을 통해 이뤄짐.
 -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13)에 의하면, 건설 근로자들이 실제 활용하는 기능의 습득 경로는 공고 · 공공 직업교육기관 · 민간 직업전문학교 · 사설 기술학원 등을 제외한 비공식 경로(인맥을 통한 경로 85.2% 포함)가 94.5%를 차지함.
 - 한편, 대규모 공공건설 현장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능인력 3,212명 중 자격증을 보유한 기능인력은 92명으로 2.9%에 불과함(국토교통부 조사, 2012. 5 참조).

■ 부진한 원인 : 현장성 · 지불 능력 저하 및 직업 전망 부재에서 비롯된 악순환 구조

- 교육 훈련의 현장성 저하 및 지불 능력 저하 : 사업주 참여 유인 미흡
 -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현행 교육 훈련의 내용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내용과 괴리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한편, 수주를 위한 과당 경쟁 속에서 노무비가 삭감되어 고숙련 근로자에게 지불할 고임금 지불 능력 또한 저하되어 공식적인 교육 훈련에 무관심해짐.
- 직업 전망(임금 및 고용)의 부재 : 근로자 및 훈련생 참여 유인 미흡
 -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교육 훈련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숙련도가 향상되더라도 임금의 향상이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직결되지 않아 공식적인 교육 훈련에 무관심함.
-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한계 : 교육부 · 고용부는 직업 전망이 없어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기 어렵고, 국토부는 교육 훈련의 현장성이 낮아 직업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함.

1) 자세한 내용은 심규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 실시 방안 모색', 건설고용포럼 세미나(2014) 참조

<건설산업 교육 훈련 현황 및 문제점의 상호 인과 관계 분석 : 악순환 구조>



주: (국)은 국가 또는 국가 자원, (산)은 건설산업 자원, (훈)은 교육훈련기관, (사)는 건설사업주, (노)는 건설근로자 또는 교육훈련생 등과 관련된 내용임을 의미함.

■ 효과적인 교육 훈련 실시 방안의 모색

- 단기적 개선 과제(2015년 시행) : 훈련 직종 조정, 교육 훈련 여건 개선 등
 -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훈련 직종의 확대(형틀목공, 비계공, 콘크리트공, 석공 등 추가), 건설 전문 훈련기관의 지정 및 육성(예산 및 훈련 과정 우선 배정 등), 훈련생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훈련복 지급 등), 훈련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증액 등)
- 근본적 개선 과제(2015년 준비) : 현장성 제고, 지불 능력 확보, 직업 전망 제시
 - 현장성 제고 : 견학 및 실습 등 현장 연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건설산업 차원의 전담 기구(교육부 · 고용부 · 국토부와 노사 및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건설산업 교육 훈련위원회)의 설치, 지역별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의 구축 및 훈련 시설 배치, 안정적 교육 훈련 자원 확보(고용보험기금 활용, 건설 인력 육성기금 신설 검토) 등
 - 직업 전망 제시 : 숙련 인력 보유 업체에 대한 우대 제도(등록 기준,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조건, 현장 배치 기준 등)의 마련, 근로 조건 개선,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육성 프로그램 마련, 적정 공사비의 확보 및 전달을 통한 지불 능력의 확보, 숙련도별 임금 반영 등

심규범(연구위원 · gbshim@cerik.re.kr)

2014년 분양시장, 물량 증가에도 호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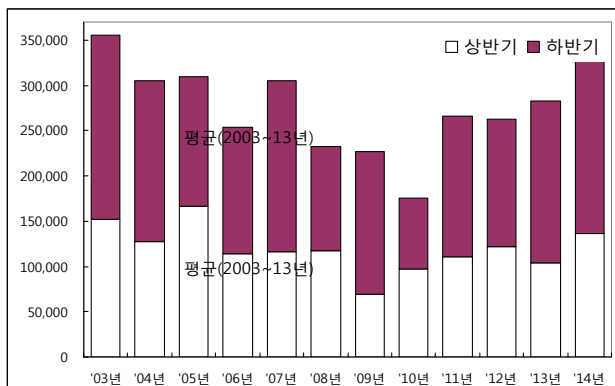
- 지방의 중형 공급 증가, 수도권은 지방 대비 공공 비중 높아 -

■ 지방 중형 중심으로 분양 물량 증가세

- 2014년,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33만 4,892호 수준이며, 전년 대비 18.4% 증가함.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물량이 1.5배 많았고, 특히 4/4분기에 물량이 집중됨.
 - 지난 14년(2000~13년) 동안 연간 평균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24.6% 증가함.
 - 수도권은 12만 2,411호로, 전년 대비 2.1% 감소. 지방은 21만 2,481호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함. 전국적으로 2/4분기와 4/4분기에 물량이 집중됨.
- 2014년도 분양 물량의 규모별 비중은 소형(60㎡ 이하):중형(60~85㎡ 이하):대형(85㎡ 초과)=3:6:1 수준으로 중형의 공급이 60%를 상회함.
 - 분양 물량의 규모별 비중은 소형 25.9%, 중형 62.4%, 대형 10.1%로 조사됨. 중형의 비중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사했고, 소형의 비중은 하반기에 들어 소폭 축소(27.1%→25.2%)됨. 반면, 대형은 소폭 확대(9.6%→10.5%)됨.
 - 수도권은 소형 28.7%, 중형 57.0%, 대형 12.9%의 비중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소형 24.3%, 중형 65.5%, 대형 8.6%로 나타남.
 - 2011년 이후 중형 물량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중형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어 중형 집중 현상이 강력한 것으로 판단됨.

<분양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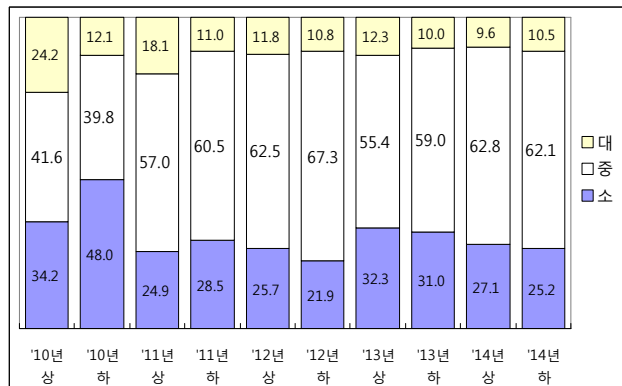
(단위 : 호)



자료 : 부동산114(주)

<규모별 분양 물량 비중 추이>

(단위 : %)



주 : 2014년 하반기는 기타 부분을 제외한 집계치임.
자료 : 부동산114(주)

■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분양 다수 이루어져

- 부산·경남권과 광주·전남권의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에서의 감소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임.
 - 전년 대비로 살펴보면, 경남(153.0%), 부산(148.2%), 강원(135.4%), 광주(128.7%)는 100%를 상회하는 물량이 공급되었으나, 제주(-53.3%), 울산(-42.2%), 충남(-9.8%)은 감소함.
 - 지방광역시는 전년 대비 49.7%, 기타 지방은 26.6% 각각 증가함.
 - 제주, 전북, 강원을 제외한 모든 도 지역에서 1만 호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짐. 기타 지방에서 연간 10만 호 이상의 분양이 3년 연속 지속됨.
 - 경기(13.5%)는 증가하였으나, 인천(-33.1%)과 서울(-22.9%)에서 감소세를 보여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기록함.
- 지방의 분양 물량 중 민간의 비중은 85.0% 수준이지만, 수도권은 59.3%에 그침.
 - 지방은 민간 분양 물량의 비중이 7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민간 임대까지 합치면 85.0% 수준임.
 - 수도권은 민간 분양의 비중이 57.9%로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 분양이 15.0%, 공공 임대가 각각 25.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방은 주택 경기의 호조로 민간 분양의 비중이 높게 형성된 반면, 수도권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 택지의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물량이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지속됨.

■ 신규 시장 호조세, 시장 내 양극화 심화

-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물량 감소가 동반하여 나타남. 전국적인 신규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나타났으나, 시장 양극화도 극심해짐.
 -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냄.
 - 수도권에서는 강남 인근 지역인 위례, 강남권 보금자리지구 및 재건축 아파트, 하남 미사 등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냄.
 - 광역권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에서 10:1을 넘어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냄.
 - 수도권과 지방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단지의 공통점은 지역 내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양호한 주택지에 입지하고 있음. 동일 지역 내 청약 경쟁률의 편차도 확대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 17	대한건설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규제개혁협의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주택 규제 개선 관련 현안 점검 및 향후 대책 마련
12. 19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소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분쟁 조정 위원으로 참여
12. 22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15년 경제 정책 방향 등 논의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리총괄과 주최, ‘제4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14년 부담금 운용 평가 등
12. 23	공무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14년 자산 운용 실적 및 2015년 자산 운용 계획 심의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옴. • 공공공사의 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수행 결과, 유효 응답자의 85.3%가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변 • 시공자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적 권리를 보상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한 권리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총 378건으로 피해 발생 비율이 평균 46.6%인 반면, 피해 사례 중에서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 - 설문 응답자의 85.9%가 설계 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 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16.4%에 그침. - 응답자의 76.3%가 발주자 귀책 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 금액의 조정 관련 피해를 경험한 반면,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비율은 17.8%에 불과 -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 - 응답자의 69.8%가 계약적 의무 사항으로 포함되지도 않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음.

■ 「CERIK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건설기업의 윤리 문화 재점검이 필요한 때

잇따른 입찰 담합 비리로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건설기업들은 자정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입찰 담합 근절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민들은 건설기업의 자정 결의에 진정성이 있느냐 의심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뿌리깊이 지속된 결과다. 그동안 발생했던 부실 시공, 건설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뇌물 등 부정 부패, 최근 크게 불거진 입찰 담합 관행까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동안 건설산업 내 팽배한 부정 부패와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쇠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건설산업 내 윤리 문화의 정착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관련 법령, 규정 및 제도와 참여 주체들의 의식, 사회적 관행상 존재하는 부패 유발 요인 등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기업들의 윤리 경영 추진은 이보다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는 부정 부패가 적발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건설기업이기 때문이다. 건설기업의 윤리 경영 추진은 건설산업 내 바람직한 윤리 문화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즉, 건설기업이 자발적으로 윤리 경영을 추진하면 건설기업과 협력 업체 간 부패가 근절되고 이는 더 나아가 건설기업과 발주자, 관련 공무원, 정치인 간의 부패도 근절시킬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중견 건설기업들은 윤리 경영을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현재는 중소 건설기업들까지 규모에 맞는 윤리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상생 협력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건설기업의 윤리 경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는 국가와 건설기업 간 계약이긴 해도 완공 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와의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또, 건설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하나의 건설공사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실한 계약 이행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이 국민에게 윤리 경영을 인식시키고 내부에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업 윤리 경영 시스템의 재설계와 추진 방향의 재설정도 필요하다. 윤리 경영의 추진 목표와 실천 체계, 실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윤리 경영 시스템도 재설계해야 한다. 윤리 경영은 단순히 잘 짜인 체계나 규정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데일리, 2014. 11. 3>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